

문재인 대통령 ‘촛불혁명의 승리’

TK·경남 외 전국서 1위...9년만에 정권교체 김대중·노무현 이은 ‘제 3기 민주정부’ 출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도전 실패 이후 두 번째 대권 도전 끝에 보수정권의 막을 내리고 9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또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민들의 ‘촛불 혁명’을 완수함과 동시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뒤를 잇는 제 3기 민주정부의 막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분열된 국민통합과 협치, 경제회복, 외교·안보 위기 극복 등의 과제를 앞뒀다.

9일 밤 11시30분 현재, 개표가 28.22% 가장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9.09%(360만3623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에 확실시되고 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7.01%(249만439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11%(194만6045표)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 후보와 홍 후보 간 득표 차이는 110만여표다.

문 후보는 전북 63.85%를 최고로 광주 58.31%, 전남 57.75%로 호남에서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이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충남 등에서 40%이상의 고른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20%대 초반의 지지율에 그쳤다.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TK인 대구(47.51%)·경북(54.21%)과 경남(39.23%)에서 득표율 1위를 달렸고, 부산과 강원에서도 30%대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보수정당 텃밭인 PK와 TK에서의 보수층 결집이 두드러졌다.

안철수 후보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33.54%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선거인수 4247만 9710명 가운데 3280만8577명이 투표에 참여해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 75.8%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적폐 청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권교체의 교체에 대한 열망으로 집약됐다.

특히 탄핵 정국부터 이어온 ‘문재인 대선’ 속에 다시는 보수정당에 정권을 쥐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강한 염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초 선거 초반 예상됐던 영호남 지역구도가 깨질 것으로 보였지만, 선거 막판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이 이뤄지면서 지역구도와 진보-보수 간 대결 구도가 또 다시 드러나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와 나온 뒤인 국회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황실에 들러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권교체를 염원한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으로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이며, 이는 전적으로 국민 덕분이다”고 국민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선 결과와 관련,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고 대선 패배를 인정하며 결과에 승복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19대 대통령 당선 환호 “개혁·통합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문 대통령이 9일 밤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당선에 확실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마련된 대표상황실에 들어서 두 손을 번쩍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민심, 민주·국민의당 협치 연대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따라 정치 지형 변화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따라 광주·전남 등 호남의 정치 지형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를 계기로 지난 총선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서 침체했던 총력에서 벗어나 고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석권했던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대선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9일 밤 11시 30분 현재, 호남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60%대의 득표율을, 안

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0%의 득표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추세가 최종 결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민주당 문 후보가 호남에서 다름 스코어 차이의 득표율로 국민의당 안 후보를 제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 호남의 적통 정당으로의 위치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30%대의 득표율을 얻어 최소한의 정치적 생존 조건을 지켰다는 점에서 전열을 정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설욕을 베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호남 민심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시대

적 개혁 과제를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연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정부와 국회에서 호남을 대변할 수 있게 ‘협력과 경쟁’ 구도로 묶어 미래를 열어가자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함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협치에 나서거나 연정을 제안할 수도 있어 지역 정치권의 유동성은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할 국무총리 및 내각 인선과 청와대 비서진 구성 등에서 호남 인사를 어느 정도 발탁할 것인지 주목된다. 문재인 후보

가 대선 과정에서 호남 인사 중용을 누차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집권 초기에 이를 의면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 문 후보가 제시했던 호남 공약도 집권 초반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우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안철수 후보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분간 당을 떠나 머리를 식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지원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당권 등을 놓고 내부적 갈등도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선거 D-400

민주·국민의당 다시 격돌 예고

총선·대선 이어 주도권 다툼

조기대선이 끝나고 국민은 새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엇갈리게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곧바로 400일 남은 2018년 6월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임기만료일(2018년 6월30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선거는 6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졌으며 내년 제7회 지방선거도 6월6일 수요일에 실시된다. 하지만 6월6일은 현충일이어서 한 주 밀려서 6월13일에 치러지게 된 것이다.

조기대선에 따라 들어선 새 정부는 적폐 청산과 함께 국민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은 상태. 더욱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게 돼 정치권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계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 지방선거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호남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전격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총선과 이번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각각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새 정부와 여당은 집권 1년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도 권토중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각 대선후보 진영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적으로 활동했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과 정치예비군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초석을 다져왔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곧바로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9일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앙정치 분위기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당은 대선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할 것임이 분명하며 야당에서는 반전을 노리는 양상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빨라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명기자 jkpark@kwangju.co.kr

19대 대선 지면안내

-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인가 ▶2면
- 문재인 대통령 승리 요인 ▶3면
-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 ▶4면
- 문재인 대통령 만든 사람들 ▶5면
- 광주·전남 정치지형 큰 변화 ▶6면
- 각계 인사 “새 대통령에 바란다” ▶7면
- 대선 투표·개표 이모저모 ▶8면
- 문재인 당선 광주·전남 반응 ▶10면
- 행기시작 등 5·18 과제 해결기대 ▶11면
- 코스피 새 대통령과 새 역사 쓴다 ▶14면
- 문재인 캠프필드서 시구 할까 ▶20면

호남, 또 절묘한 선택

최고 투표·득표율 文 당선시키고 安에 30%대 지지 ‘3당체제’ 유지

제19대 대선에서 광주·전남의 ‘전략적 선택’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82.0%의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남과 전북도 각각 78.8%, 79.0%로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9년 만의 정권교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선거 결과 역대 대선처럼 광주·전남에서의 ‘몰표’는 없었지만, 지역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줬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18석 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석 밖

에 없는 곳에서 문 후보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선거기간 중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선거 초반에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18석 중 16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선거결과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전략적 선택을 통해 문 후보에게 60%대의 지지를, 안 후보에게 30%대

의 지지를 보였다. 이는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했던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 막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쏠리는 보수층 결집에 대항해 당선이 확실한 문 후보로 표심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그동안 진보-보수 간 대결의 정치 구도와 계파 패권주의에 지친 지역 유권자들이 양당 체제가 아닌 ‘3당 체제’를 유지하도록 국민의당에 30%대의 지지를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